나눠먹기식 사업 배분…낙후지역 격차 해소 노력 미흡

새정부 지방균형발전 청사진 발표
17개 시·도 동일 수준서 배분

광주, AI 대표도시 등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국정과제 포함

전남, 우주·항공 클러스터 등 7개 道, 해상풍력 발전 단지 반영 총력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밑그림이 나왔다. 광주·전남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러 차례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가장 낙후한 호남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일부에선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다소 실망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내 각 지역 간 갈수록 커지는 격차에 대한 시정·개선 노력이 미흡한데다 여전히 17개 시·도를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나눠먹기식'으로 대규모 사업을 배분했기 때문이다.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 재정의 집중적인 투입, 인구집중지역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광주시 문영훈 권한대행 체제 속 선방=인수위는 균형발전 광주지역 공약으로 7개 공약 15대 정책 과제를 확정했다. 그동안 문영훈 광주시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지역현안 과제 채택을 제안해온 광주시는 모든 제안 과제가 채택됨에 따라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간 광주시는 문영훈 행정부시장 중심으로 인수위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지역 현안 과제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광주시는 다만 '5대 추가 현안과제'에 대해선 전국 17개 시도 모두 공통으로 제외됨에 따라 향후 정부를 상대로 추가 반영을 위한 활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가 제안해 최종 확정된 7대 공약 사업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 ▲광주~영암 초(超) 고속도로와 달빛 고속철도 건설 ▲도심 군 공항 이전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건립 ▲5·18 국제 자유민주 인권연구원 설립(광주 국제 자유민주 인권 도시 조성) ▲복합쇼핑몰 유치 등이다.

광주시가 이들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제안한 15대 정책과제도 모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AI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비롯한 AI 영재고 설립, 국가 산업별 인공지능 사업화, 국가AI데이터센터·광주과기원 연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AI-메타버스 융합도시 조성 및 문화콘텐츠의 개발·생산·유통 전략적 지원,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차량용 전력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인공지능 기반 센서기술 고도화 및 미래 모빌리티 전후방 연관산업 첨단화, 광주~영암 간 속도 무제한 초고속도로(아우토반) 건설(자율주행차·고성능슈퍼카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 광주~대구 간 달빛고속철도 임기 내 준공, 광주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화, 군공항 종전 부지 광주 4차산업 기술을 망라한 그린 스마트시티 조성,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광주국제자유민주인권도시 조성 등이다.

광주시는 이에 더해 '서울~광주'와 '광주~부산'을 2시간 후반대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확충, 광주 송정역 복합 역사 건립, 아시아 아트 콤플렉스 조성, 2038 광주·대구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5개 현안 과제를 추가로 요청했으나, 전국 17개 시·도 모두 추가 현안과제는 이번 균형발전 지역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다.

문영훈 권한대행은 "지역 현안의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이 미래 광주 먹거리를 결정한다는 사명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동원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면서 "반영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이번에 미반영된 추가 현안과제도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 7대 공약 외에 국정과제에 신안 해상풍력 사업 포함 총력=전남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광역 고속교통망 확충, 광양항 글로벌 스마트항만 조성, 무안국제공항 관문공항 육성, 첨단의료복합단지·푸드 바이오밸리 조성,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구축 등이 7개 지역공약에 선정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이 모두 포함됐다. 전남도는 윤 당선인에게 당초 8대 공약을 제시했으나 첨단의료복합단지와 푸드 바이오밸리를 하나로 합쳐 7대 공약으로 조정했다.

전남도는 이와는 별도로 인수위가 최근 재검토 의사를 밝힌 전남도의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수위 내에서 경제성, 전기요금 인상, 전력계통 등의 문제가 지적된 뒤 전남도는 현재 인수위에 파견돼 있는 박창환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업비 48조5000억원 가운데 48조원이 민간자본이기는 하지만, 법·제도적인 정비, 한국전력의 선투자 등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15대 국정과제 및 76개의 실천과제를 제5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 (2023~2027년)에 반영해 사업의 실천성을 강화하고 및 사업 간 연계를 촉진할 방침이다. 이 계획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둔 범정부·지자체 통합계획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와 연계된 실행계획이다.

15대 국정과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균특회계 규모를 현재 10조원에서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마지막 시험 앞둔 문 대통령…특별사면·검찰개혁법안 처리 주목

사면 단행·거부권 행사 여부
막판까지 민심 살피며 고심

임기를 채 보름도 남기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과 검찰개혁법안(검수완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주목된다.

특별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정치인과 기업인의 거취와 맞물려 있어 국민적 관심사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 분위기 속에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대가 크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가 이뤄지면 거부권을 행사할 지가 관건이다. 사면권과 법안 거부권 모두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모두 국민 여론과 직결된 문제여서 막판까지 민심을 살피며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특별사면은 정치권은 물론 종교계와 재계를 중심으로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통합 등을 위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이 부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사면하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면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국민의 지지,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정치권에선 국민 여론에 따라 사면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통합을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퇴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정경심 전 교수 등 모두 정치적 폭발성이 크다는 점이 부담이다. 시대적 화두인 공정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석가탄신일인 5월 8일에 사면을 단행하려면 이번 주 안으로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선 문 대통령은은 여야의 합의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기존 합의안을 뒤집고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어 민주당 단독 강행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귀결된다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강행 처리의 귀책 사유가 중재안을 뒤집은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다만, 내달 국무회의에 올라오는 검수완박 법안을 문 대통령이 직접 의결을 위해 '방망이'를 두드려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고심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한 야당과 검찰, 민심의 반발 등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힘 지방선거 호남 두 자릿수 득표할까

광역·기초의원 당선자 배출도 관심

6·1 지방선거 광주·전남지역의 대진표 윤곽이 갖춰지면서 국민의힘이 불모지로 여겼던 광주·전남에서 어떤 성적표를 거둘 지 주목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인의 복심'으로 알려진 주기환 예비후보를 광주시장 후보로 내세웠고, 과거 '호남 예산 지킴이'로 활약한 이정현 전 국회의원을 전남지사 후보로 올려 두 자릿수 득표율을 노리고 있다.

또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후보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후보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민주당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4년 전, 제7대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지역 통틀어 기초단체장 1명의 후보를 낸 것에 비하면 국민의힘의 달라진 호남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지역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두 자릿수 득표율과 함께 광역·기초의회 등에서도 국민의힘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까지 광역단체장에는 광주시장에 주기환 전 광주지검 수사과장, 전남지사에 이정현 전 의원이 공천됐다. 광주 기초단체장 후보는 3명, 전남은 4명이다. 광역·기초의원에는 광주 17명, 전남 14명이 등록했다. 정당 득표수로 의석이 배분되는 광역의원 비례대표에 광주 4명, 전남 6명이 몰렸다. /오광록 기자 kroh@